

대학교협의 현재와 미래

• 일시 : 2002년 1월 31일(목)

• 장소 : 힐튼호텔 3층 앰버룸

참석자

조완규(전 서울대 총장/사회), 박영식(광운대 총장), 김민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윤형섭(호남대 총장), 현승일(국회의원), 윤형원(전 충남대 총장), 이현청(대학교협 사무총장)



사회 : 조완규

제 4대('88. 4. 8~'90. 4. 7) 대학교협 회장. 서울대 총장, 교육부 장관, 한국과학기술원원장을 역임하였다.

이현청 금년 4월에 대학교협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청년기에 접어든 대학교협의 오늘이 있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해주신 역대 회장님 중 여섯 분을 모시고, 대학교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조완규) 오늘 참석하신 역대 회장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대학교협 회장직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주최측에서 사회를 맡긴 것 같습니다. 1982년 대학교협 설립 당시 회원 대학 수가 97개교이던 것이 20년이 지난 지금은 194개교가 회원 대학으로 가입되어 있어 그간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관의 경이적인 양적 팽창을 보는 것 같아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좌담회의 주제인 '대학교협의 현재와 미래'를 염두에 두면서 먼저, 대학교협 회장직을 역임했던 순서대로 재임 시절을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규제가 많았던 권위주의 정권시절인 제 5공화국 초기에, 오히려 대학간의 자율 협의기구로서 대학교협이 탄생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매우 진취적이고 개방적 조치의 결과로, 한국 고등교육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재임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 가운데 주목할 만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첫째는 대학교협 사무총



권위주의 정권시절
대학간 자율 협의기구로서
대교협이
탄생하였다는 것은
매우 진취적이고
개방적 조치의 결과로,
한국 고등교육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장을 선임하는 문제로 '80년대까지만 해도 사무총장 선출에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당시 사회 민주화의 추세에 걸맞게 후임 사무총장 선출을 대교협 이사회에서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율적으로 최초로 선출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부와 대교협과의 관계가 그 이전과는 달리 상호 협력하기도 하면서 또한 서로 견제하는 관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임 조완규 회장님 재임시에 최초로 정부의 재정지원 100억 원을 확보한 이래, 저의 재임시절에 국고지원금의 규모는 200억 원으로 우리나라 사립대학 운영비의 약 1%를 차지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교육부 장관이셨던 윤형섭 총장님이 대교협의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노태우 대통령의 결심을 얻어낸 결과로서, 이후 정부의 지속적 재정지원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매년 조금씩 증액되고 있기는 하나 선진 외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립대학이 목표로 삼고 있는 운영자금의 10% 수준으로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이 대교협이 주도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박 영 식

제 5대('90. 4. 8~'92. 4. 7) 대교협 회장. 연세대 총장,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현재 광운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민하

제 8대('96. 4. 8~'97. 2. 11) 대교협 회장. 중앙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학교육에 무한경쟁의 개념이 도입되어 오히려 교육적 원칙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 자율적 협동을 전제로 한 경쟁이 위축되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김민하 제가 재임하던 시절에는 문민정부에 의해 대학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로서, 개혁 정책들이 대학들로 하여금 자체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는데 촉매 역할을 하고 우리 대학들의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신장된 것이란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무한경쟁의 개념이 도입되어 오히려 교육적 원칙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이나 대학간의 자율적 협동을 전제로 한 경쟁이 위축되는 결과란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정부의 대학 재정 차등지원 정책은 그 당시 대학 사회의 매우 큰 이슈였는데, 이는 재정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대학과 우수 학생 확보가 어려운 지방 소재 대학들을 위기로 몰아가는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는 부작용도 야기했습니다.

또한 남북한 교육자들이 개방적 자세로 만나 평화통일 문제와 통일 대비 교육을 논의하기 위해 북측에 남·북 대학 총장 회담의 개최를 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회담 제의는 지난 '91년의 민족화해와 교류를 통한 남북합의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 당국의 승인 하에 합법적 절차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윤형섭 작년 11월 대만의 중국문화대학에서 개최된 한·중·일 사학발전을 위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에서의 가장 큰 이슈가 국가에 의한 재정지원 문제였습니다. 3국의 대학 총장들은 이 심포지엄에서 세 가지를 합의하였는데, 첫째가 어떠한 이유로도 대학의 자율권은 침해될 수 없다. 둘째, 정부는 마땅히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증대해야 한다. 셋째,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유가 되어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사립대학과 정부와의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국이 대학 운영수입의 19%를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영국은 35%, 일본이 13.3%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4.7%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학과 대교협은 정부에 대해 국고지원의 지속적 증액을 요구함과 더불어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야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대학의 자율권 보장이 마땅히 양립할 수 있음을 실천해 보여야 되겠습니다.

현승일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에 대교협 회장직을 맡은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과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어떻게 견지 내지는 확대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개혁 구상이 정도를 지나쳐 대학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었으며, 대학 운영의 파행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중의 한 조항은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강제하려는 것이었고, 이것은 대학에 제도적으로 파벌을 조성하고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소위 공익대표를 3분의 1 이상 선임토록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학에 대한 아무런 기여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인사들을 의결권을 갖는 임원의 자리에 영입하라는 것으로서 의무와 권한의 관계를 심대히 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교협을 중심으로 총장들이 단합하여 개정 법률안 통과를 저지하였습니다. 그 때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서 교수업적평가제란 강제하려는 정부의 지시에 대해서는 대교협에서도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동의하였으나 그 추진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도록 요구하면서, 제가 소속된 국민대학교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타 대학에 확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조완규)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대교협의 과거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교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하도록 합시다.

윤형원 대교협은 헌법 제 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기구로 만들어지고, 조직되었습니다. 대교협법 제 3조에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에 가장 중요했던 과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어떻게 견지 내지는 확대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 승 일
제 9대('98. 4. 8~2000. 4. 7) 대교협 회장, 국민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교협은 시세에
편승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논리에 입각하여
대학발전을 위한
주장을 일관성 있게
견지함으로써
결국 대학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



윤형섭

제 8대 보선('97. 2. 12~'98. 4. 7) 대교협 회장. 교육부 장관, 건국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호남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는 분명히 대학의 교육제도와 운영, 학생선발제도,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 교육과정과 교수방법, 대학평가, 교직원 연수, 기타 교육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 대학정책을 스스로 연구 개발하고 이를 시행 보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교협은 대학을 선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자율협의체로 발전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교협이 주어진 기능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비를 국고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교협의 존재 의의는 대학의 자율성 신장에 있으므로 그 목적이 대교협법에 보다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또한 대학 사회를 선도하는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장의 임기도 늘리는 등 현행 대교협법을 시대적 요청에 맞게 개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형섭 정치학자 Henderson이 한국의 정치 상황을 소용돌이라고 언급했듯이 지난 20년도 격동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격동의 와중에 우리 대학의 현장은 교육의 문제가 때론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에 의해 지배되어 훼손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선거가 있는 때에는 더욱 더 이익집단들의 자기 몫 챙기기가 창궐하여 교육정책들이 교육 논리에서 벗어나 심하게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교협은 그런 시세에 편승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논리에 입각하여 대학발전을 위한 주장을 일관성 있게 견지함으로써 결국 대학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식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회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운영과 학사 조직도 새로운 사회에 맞게 재구조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과거 1950년대에는 기초학문 중심으로, 그리고 1960년대 이후의 산업사회에서는 그 사회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본포나 학과 편제가 있었듯이 말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지고 있는 대학 관련 업무를 대교협에 과감히 이양하여 대학 문제에 대해서는 대

교협이 실질적인 중심축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사회(조완규) 동감입니다. 주요 대학교육 정책은 관료에 의해 독점적으로 움직여져서는 안되고 대학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윤형섭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교육부 장관 재임시절 대학교육심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주요 대학교육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그 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형원 대교협은 그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학교육 정책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함으로써 관련기관으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되겠습니다.

사회(조완규) 문제의 핵심은 예산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대학자율화 문제는 결국 통치권자의 의지에 의해 결정어진다고 봅니다.

김민하 재차 부언하건데 정부가 주요 대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대학교육 전문가와의 협의 과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교협이 주요 대학교육 정책의 수립과정에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까. 또한 대학의 지도부가 민족 문제나 통일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족이나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대교협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까.

현승일 그러나 대교협의 현실은 좋지 않습니다. 현재 대교협의 국고 지원액이 10억 원도 채 안 되는 형편이 이를 말해 줍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대교협의 대학평가는 나름대로

대교협은 대학교육 정책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함으로써 관련기관으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되겠습니다.



윤형원
제 10대(2000. 4. 8~2001. 2. 28) 대교협 회장, 충남대 총장, 한국교총회장은 역임하였다.

대학교협의 명칭은 그 성격에 맞게 개칭할 필요가 있으나 대학교협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며, 영문 명칭은 당장 (AKUP)로 변경하여 홍보할 것입니다.



이 현 청

대학교협 사무총장이며 아·태지역 고등교육협력기구(UMAP) 의장, 미국 고등교육평가인정위원회(CHEA)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대학교협의 평가 결과란 교육 당국이 활용하지 않고 정부는 정부대로 별도로 평가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대학교협이 어려운 여건 하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럴수록 회원 대학 스스로가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교협을 지원하고 권위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들이 지금보다 회비를 더 부담해야 되며 특히 대학교협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대학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여 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윤형섭 대학교협이 현재 대학 발전을 위해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회원 대학과 관계기관에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무처에서는 현행 홍보시스템을 점검하고 홍보 효과!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문제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은 우리 대학교협과 대학총장협회를 혼동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대학총장협회는 전·현직 대학총장들의 단순한 친목단체에 불과하지만, 대학교협은 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전국 4년제 대학의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공식기구이므로, 사무처에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란 취해야 하겠습니다.

이현청 지난 1월 17일에 개최된 제 106차 대학교협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대학교협은 대학을 대표하는 총장님들이 모여서 대학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는 명칭은 적절하지가 않아 그 성격에 맞게 개칭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협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다만 영문 명칭은 당장 Association of Korean University Presidents(AKUP)로 변경하여 회원 대학과 관련기관에 홍보하도록 함과 아울러 회원 대학에 현직 총장님들이 대학총장협회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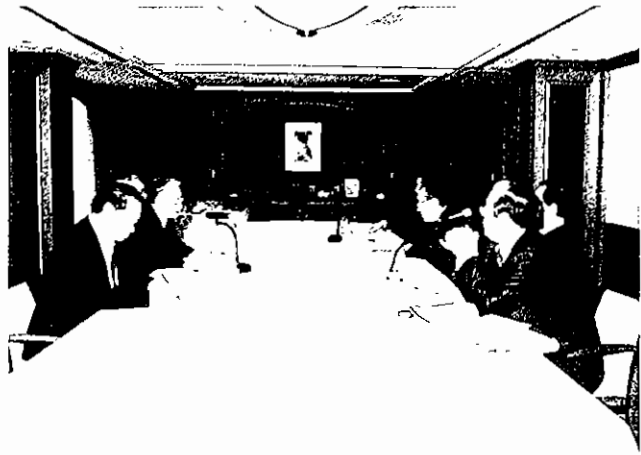
박영식 정부로부터의 대학 자율성 확보는 개별 대학 차원에서는 연

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개념은 바로 경쟁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수월성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교수

의 확보는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제 1차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들은 교수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완전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하며, 미국처럼 교수인력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수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합리적 평가기준을 토대로 한 교수 연봉제와 계약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대학이란 조직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어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대학도 앞으로는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교협이 대학을 변화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WTO 체제 하에서의 고등교육 부문의 전면적 대외 개방이, 조만간 학사관리, 학생모집 등 대학운영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정보제공 및 대책 수립에 대교협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조완규) 지금까지 진지하게 좌담회에 임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교협의 발전이 바로 대학들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변함 없이 회원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교협이 21세기에 걸맞은 대학교육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보다 역동적인 대학간 협의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며, 이만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



대교협의 발전이 바로 대학들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변함 없이 회원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